전남도-순천시-순천대 "국립의대 정원 배정 협력"

김지사, 순천시장·순천대 총장 면담
정부 추천 대학 선정 절차 등 설명
5월 입시요강 발표전 배정 노력 약속
"법적권한 교육부 진행해야" 의견도

전남도의 국립 의과대학 설립 추천 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 방식에 반발한 순천대 등이 큰 틀에서 전남 의대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18일 이병운 순천대 총장, 노관규 순천시장, 정병회 순천시의회 의장과 만나 국립 의과대 추천 대학 선정 절차를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

이번 면담은 지난 15일 송하철 목포대 총장, 박홍률 목포시장, 문차복 목포시의회 의장과 면담에 이어 대학과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 지사는 정부가 확정한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 추진'을 구체화하고 완성하기 위한 정부 추천대학 선정 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전남도, 순천대, 순천시, 순천시의회는 5월 대학의 입시요강 발표 전에 전남 소재 국립대학의 의과대학 정원을 배정받기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

순천시와 순천대 측은 "전남도는 대학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의대 설립 절차는 법적 권한이 있는 교육부에서 진행해야 지역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측은 지난 대통령 민생토론회 당시 "어느 대학에서 할지를 전남도에서 의견수렴해 알려주면 추진하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과 "지역 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청하라"는 국무총리의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도 차원에서 의견을 정리해서 건의하라"는 복지부 차관의 언급을 상기시켰다.

이어 "이는 정부가 전남도에 추천 대학 선정을 공식 요청한 것이며, 법률 자문 결과에서도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절차로서 적법 타당하고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추진 과정에서 양 대학과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생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전남도에 요청했는데도 다시 정부에 대학 선정을 넘기면서 시간을 허비한다면, 의대 신설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며 "5월 말 입시요강 발표 전까지 의대 증원 2천 명 내에서 정원 배정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원 배정을 받기 위해, 정부가 요청한 추천 대학 선정 절차를 잘 진행하면서 그 과정을 정부에 계속 설명하고, 전남도에 의대 정원을 배정해달라고 요청하겠다"며 "순천대가 정부 추천대학 선정 절차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면, 전남도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의대 정원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정부 추천 대학 선정을 위한 용역기관 선정과 함께 추진 과정에 순천대학교가 참여하도록 시간을 갖고 설득할 계획이다.

곽지혜 기자

대통령 자문기구 '광주다움 통합돌봄' 벤치마킹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방문
돌봄콜·의무방문 등 성과 주목

광주시의 돌봄복지 모델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시행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기구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시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인호 부의장과 민생경제분과 위원들이 초고령사회에 지속할 수 있는 돌봄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9일 '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을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

헌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며, 부의장이 실질적으로 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민생경제 △거시금융 △혁신경제 △미래경제 △경제안보 등 5개 분과로 나눠 활동한다. 민생경제 분과는 복지·돌봄서비스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건강·주거·재난관리 등 국민 생활안정 분야에 자문 의견을 제시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핵심적 실행 주체인 5개 자치구 공무원과 민간 서비스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어 방문진료 서비스를 시행 중인 광산구 우리동네의원과 함께 거동이 불편해 직접 병원을 찾기 어려운 뇌졸중 환자 가정의 '방문진료' 현장을 동행했다.

자문회의는 기존 돌봄제도가 갖는 사각지대와 서비스 누수에 대한 대안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전달체계에 주목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본인이 아닌 누구라도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발견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단일창구 '돌봄콜(1660-2642)'을 운영한다. 정보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는 초고령 노인과 은둔·고립 1인가구는 신청하지 않아도 먼저 방문해 돌봄이 필요한지 살피는 '의무방문' 활동을 펼친다.

이를 지탱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1대1 케어매니저' 활동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이들의 서비스 연계 활동이 복지분야의 만성적 병폐인 중복과 소외의 이중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 열쇠라는 판단이다.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인간 존엄을 잃고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의 삶을 어떻게 구해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광주다움 통합돌봄이야말로 노인인구 1000만명 시대를 앞두고 우리 사회가 갖춰야 할 돌봄 시스템의 혁신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병하 기자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19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광주다움 통합돌봄 선도사례 현장방문' 보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전남형 만원주택' 속도

도·고흥·보성·진도·신안 협약

전남도는 지난 18일 고흥·보성·진도·신안군, 전남개발공사와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전남형 만원주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 중 전남도는 16개 군이 포함돼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에 전남도는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지방 소멸 극복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과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신축해,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을 거주할 수 있다.

도비와 광역소멸기금 등 2843억원이 투입된다.

전남도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6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 공모 절차를 거쳐 지난 3월 고흥·보성·진도·신안군 4개소를 확정했다.

단지별로 전남도에서 50호를 공급하고, 진도군은 군비를 더해 10호를 추가 공급, 총 210호가 건립될 전망이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공영민 고흥군수, 김철우 보성군수, 김희수 진도군수, 김재광 신안군 부군수,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 전남도의회 의원과 청년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사업비 부담 및 관리·운영비 지원, 4개 군은 사업 부지 제공 및 지역 일자리 확충, 전남개발공사는 만원 주택 사업 시행 및 시설 운영의 전반적 관리를 하게 된다.

곽지혜 기자